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1. 4.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23.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달서구청장(청렴감사실)
- 제출일자: 2021. 4. 8.
- 회부일자: 2021. 4. 9.
- 검토기간: 2021. 4. 12. ~ 4. 16.(5일간)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20.12.22. 공포, ' 21.6.2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안 제2조제1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 위원회 의결정족수 변경(안 제6조제2항)
 -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안전의결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
- 위원회 의결사항을 상위법령과 맞게 정비(안 제6조제2항 2호)
 - 법 제8조의2제1항을 법 제8조의2제2항으로,
법 제8조의2제5항을 법 제8조의2제6항으로 변경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9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2021. 3. 11. ~ 3. 31.) 결과: 의견 없음
- 행정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비해당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의결정족수 변경 및 의결사항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 계 법 령 】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 12. 3.>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10. 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10. 28. 2020. 6. 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